

"한일관계, 국익기반 냉철히 판단해야...소통·결단 필요"

기사입력 2015/04/08 16:18 송고

국립외교원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및 외교청서 발표로 한일 과거사·영토 대치의 파고가 높아진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일관계의 돌파구 마련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8일 오후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연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한일관계 및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대일외교의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은 "우리 외교도 일본 외교도 강대국이나 주변국, (총리)관저나 청와대, 여론의 눈치보기를 끝낼 때가 됐다"며 "전략적 이익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주의의 악순환을 끊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지역 강대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이 현재 일본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단히 구조적 문제와 연관돼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주어져 있다"며 일본 문제는 "해결보다 관리에 중점을 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역사 문제를 지금의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외교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와 일본이 가진 역사인식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국가 이익에 어떤 위협을 주느냐는 점에서 접근하고 위협을 예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소통을 바탕으로 한 한일 양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 결단과 용기가 한일 양국에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 해결의 로드맵 논의와 관련해 "양국 정상의 의중을 담은 사람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 공공외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를 맡은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대일 외교에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4/08 16:18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